

역사는 승자의 기록?

박 종 기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황금률로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 역사학이 지배계급의 합리화와 정통성을 부여하여 온 전근대 봉건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었던 황금률이 새롭게 부활한 망령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980년의 ‘5월’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5월’의 공소시효를 눈앞에 두고 ‘성공한 내란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전근대 지배계급의 역사평가의 보도(寶刀)인 그 황금률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마치 이를 깨우쳐 주기라도 하는 듯하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의 잘못된 역사평가가 내재되어 있다. 하나는 현실의 모순에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려는 역사평가이며, 둘째는 아예 현재의 드러난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그것을 추켜 세움으로써 또다른 모순을 은폐하려는 역사평가이다. 그러나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전근대의 황금률로써 현재의 지위나 체제를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얕은 꾀는 어디까지나 ‘승자’의 단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135년 서경 지역에서 일어난 묘청난은 고려전기 지배구조를 동요시킨 큰 사건이었다. 당시 난을 주도한 묘청은 이로 인해 자신을 진압한 김부식 일파에 의해 민심을 현혹한 요망한 승려이며, 국왕의 권위를 짓밟은 반역아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를 평가한 잣대는 충군애국(忠君愛國)이라는 가치기준의 유교사관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진압 총사령관인 김부식은 즉시 서경의 주변지역을 차단하고 서경성을 완전히 봉쇄하였다. 그러나 봉쇄된 지 불과 3개월만에 서경인들이 스스로 묘청을 배어 항복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묘청의 난’을 진압한다는 김부식 일파의 명분은 사라진 셈이었다. 그러

나 김부식은 과일진압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끝내 서경성의 봉쇄를 풀지 않았다. 그는 진압을 기화로 서경을 봉쇄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서경민들의 불만의 싹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했다. 이러한 진압책은 도리어 서경인의 분노를 불러 일으켜 난을 격화시켰다. 이후 약 10개월간의 봉쇄로 서경인들이 거의 아사상태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서경성은 함락되었다.

이 사건은 김부식 일파가 명명했듯이 묘청이 주도한 '묘청의 난'이 아니라, 오히려 서경인의 개경정부에 대한 항쟁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서경 주민의 민심이반, 즉 서경의 이념적 지역적 중요성에 반하여 오랫동안 소외받아 왔던 이 지역 주민들의 개경중심의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김부식 일파는 서경주민의 그러한 반감을 애써 외면한 채 묘청 개인의 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평가를 하였다. 당시 사건의 진실을 외면한 김부식 일파는 겨우 한 세대가 지나지 않은 1170년 무인 쿠데타 세력에 의해 제거되었다. 곧이어 1174년 조위총의 봉기로 상징되는 서경지역의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김부식 일파의 몰락과 서경 주민의 봉기에는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자의적 평가도 한몫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유명한 명제가 시사하듯이 역사평가는 항상 역사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시대조건과 결부되어 이루어진다. 즉, 역사가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하는 분명한 시대인식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부식 일파와 같이 현재의 시대상황과 모순에 눈을 감고 특정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역사평가는

도리어 객관성을 잃게 되어 현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안게 된다. 역사평가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평가의 잣대가 되는 '현재'는 현실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미래 전망을 포기하고 현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평가는 지배의 도구나 특정 이데올로기의 봉사자로 타락하게 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 속에는 역사는 언제나 불의한 승자에게 합리화의 도구로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구(警句)의 뜻이 숨어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역사평가가 아닌 현실적인 효용성에 치중한 역사평가의 잘못을 역설적으로 지적한 경구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평가에서 현실적인 역학 관계가 미래지향적 평가의 중요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측면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교훈을 거역하는 역사평가는 현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는 '곡학아세'류의 역사평가가 된다.

최근 우리 학계 일각에서 일제의 식민지 시기를 '침략과 저항'이 아니라 '침략과 개발'의 역사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제의 조선침략이 조선사회를 식민지체제로 재편, 조선민중을 수탈하고 그들을 궁핍케 했다는 것이 우리 학계의 정설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한국인의 민족해방운동을 식민지시기 역사서술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자는 일제의 식민지화가 조선의 역사발전을 지체시킨 것이 아니라 조선의 경제를 개발 발전시켰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저개발'이 아니라 '개발'의 측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재평가하는 것이 현대 한국 자본주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첩경이 된다는 알 듯 모를 듯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나아

가 1960년대 이래의 한국 자본주의화는 일제에 저항한 계층이 아니라 일제의 교육을 받은 박정희와 같은 인물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실에 의의를 부여하면서, 자본주의화는 근원적으로 식민지시기 일제의 조선개발정책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저항의 역사로서의 독립운동사의 특권화는 우리나라 역사서술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속성과 대외의존성의 심화가 현대 한국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현실이다. 이는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와 그 산물인 분단체제에서 비롯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현대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가질 때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역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제의 조선침략이 조선의 역사발전을 위해 불가피하였다는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은 식민지교육을 통하여 부단하게 한국인을 세뇌하였으나, 이제 그것이 역사의 왜곡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약탈적이고 야만적이었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우리 역사를 왜곡 조작하는 커다란 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런데도 전혀 반성의 기색도 없이 해방 이후에도 일본인 정객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식민지화가 조선의 역사발전을 도왔다는 신판 정체성론인 '식민지 시혜론'의 망언을 되풀이 하였던 것은 과거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그들의 야망 때문이었다.

그런데 역사평가를 빌미로 이제는 한국인 스스로가 신판 정체성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 현대 자본

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일이 듣기에 나쁜 것 같지 않으나, 그 속내가 지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나아가 신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최근의 국제적 음모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역사평가는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역사평가는 역사가의 사관에 기초하기 때문에 역사가 자신에게는 역사평가 자체가 연구의 '종착역'이 되나, 다른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역사평가를 위한 준거가 되어 새로운 역사학의 '시발역'이 된다. 따라서 역사평가는 역사연구의 본질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일부 연구자들은 역사평가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근거를 찾기 위하여 마치 사막에서 바늘귀를 뚫지는 격의 지루하고도 어려운 작업에 가까이 매달리면서도 역사평가를 애써 외면하거나 꺼리는 것은 혹시나 자신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여 현재를 미화, 합리화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다. 비록 사료더미 속에서 이 사실 저 사실을 주워 짜맞추기한 그야말로 '가위와 풀의 역사'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봉사자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는 역사가 특유의 고집 때문인지도 모른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망령을 좇아 봉건적인 역사관의 미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자신과 몸담고 있는 사회를 불행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 ■

박종기/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시대 부곡제(部曲制) 연구』 등의 저서와 "고려중기 대외정책의 변화" 외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